



각 보고서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보도 자료

퇴직연금 실물이전 고도화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2026.08.24.

[퇴직연금 실물이전 실적 및 한계]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24.10월말) 이후 '26.6월말까지 15.9조원(일 평균 261억원)이 이전되었고, '26.상반기 이전 규모는 6.9조원으로 전년 동기(3.2조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서비스 이용 확대 중. 권역별로 은행→증권 5.2조원 이전되는 등 증권 권역으로의 머니...

기업에게 알려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이렇게 운용하면 달라집니다

금융감독원 2026.08.26.

(배경)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편중된 확정급여형 운용 관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운용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로, '25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501.4조원)의 약 4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체계적 운용을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제도...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금융감독원 2026.08.27.

'26.상반기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투자손익 등이 크게 개선되어 전년동기 대비 증가. 또한,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부자산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보험부채 감소 및 주식 가치 상승 등으로 총자본은 증가. 최근 중동상황 장기화 등으로 금리?환율?주가 등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어 손익 및 재무건전성...

26.6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금융감독원 2026.08.28.

보험회사의 '26.6월말 대출채권 잔액은 266.0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9조원 증가(0.7%↑)하였으며, 가계대출 잔액(136.1조원)은 전분기 대비 1.6조원(1.2%↑) 증가, 기업대출 잔액(129.8조원)은 0.3조원(0.2%↑) 증가. 최근 경기변동성 확대 및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보험권 연체율 및 부실채권비율이...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 실현을 위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금융감독원 2026.08.30.

금융감독원은 '26.8.27.(목) 14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이

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금일 회의에서는 은행권 비예금상품 제도 및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보험사기 척결 등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6개 안건을 논의.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금융감독원 2026.09.02.

자동차보험은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가해자를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나, 일부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 누수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자동차 보험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 이러한 적자가 누적될 경우 선의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금융 인허가, 등록 사전협의 절차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금융감독원 2026.09.06.

금융감독원은 ‘25년 발표한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인허가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9.7.(월)부터 인허가, 등록 등 신청인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요 인허가,등록 8종에 대한 사전협의 신청시 자가점검 기능, 진행상황 안내 등을 제공하고...

2026년 7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2026.08.14.

'26.7월 소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2조원 증가하여 전월(+8.3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3.5조원 증가하여 전월(+4.5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은행권(+4.3조원→+3.4조원)과 제2금융권(+0.3조원→+0.1조원) 모두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기타대출은 +2.7조원 증가하여...

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차단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산업 신뢰를 제고...

금융위원회 2026.08.20.

[1] 최근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되는 가운데,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토대로 소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보험사기...

보험업권이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9월 출시합니다.

금융위원회 2026.09.01.

보험업권은 질병이나 상해 등 불측의 사고 발생시 보다 큰 재정적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권은 취약계층 대상의 상생보험 무상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생보 150억원, 손보 150억원)을 조성1)하였으며, 전복과 최초로...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해 226만 명에게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환급

보건복지부 2026.08.30.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 이하 공단)은 2025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31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2025.1.1.~12.31.)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 엄격 심사 추진

보건복지부 2026.09.01.

8월 31일부터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이하 '추납')를 신청할 경우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또한 기존 국민연금의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2026.09.03.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9월 3일(목)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건강e음')에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의료기관별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입법 자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2026.08.19.

현행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보험에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지원율은 매년 이에 미달해 2025년에는 2.1%에 그쳤음.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 적자 전환 및 2029년 준비금 소진이 예상되는바 재정 지원 확대와 기한 연장이 시급함. 이에 국민건강증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2026.08.20.

현행법은 차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개정(2019.3.28. 시행)으로 노면전차가 교통체계에 편입되었음에도 특례 대상은 여전히 차로 한정되어 노면전차 및 운전자 제외되어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취지에 맞추어 특례 대상에 노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6인 2026.08.21.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 공시 기준 법제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인은 기업 가치와 투자 위험 평가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기업의 투명성과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됨. 이에 환경·사회·지배...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유용원의
원 등 18인 2026.08.25.

최근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대형 계약 등 특수성을 반영한 전용 무역보험의 부재와 수출입은행 대출과의 연계 미비로 방산기업의 금융 접근성에 한계가 지적됨. 이에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여 계약 체결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간의 연계...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2026.08.26.

AI 전환 및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치료 중심에서 예방·환자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주요 선진국 역시 관련 혁신 전략을 추진 중인바, 국내에서도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됨. 이에 지능정보기술과 의료정보를 활용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3인 2026.08.28.

고령운전자 증가 등으로 페달 오조작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방지장치 장착 및 평가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페달 오조작 예방 성능을 지속 평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제작 단계부터의 성능 향상 유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안전도평가 시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2026.08.28.

최근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타당성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검토·통지하고 이의 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판단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 등의 안내 규정이 미비하여 환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음. 장기치료 검토 결과는 치료 지속 및 진료수가 지급에 직결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2026.09.03.

치매환자의 실종 사고가 지속되면서 안전보조기기 보급 필요성이 커졌으나, 민간 사업 의존과 지자체별 편차, 사후 관리 체계 부재로 실질적 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치매환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조기기



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중앙·광역·기초(치매안심센터)로 이어지는 전달체계에 기관별 특성에...